

과태료 없는 경차·임산부 전용구역... 무단주차 판친다

현행법상 단속 법적 근거 없어... 계도 활동 의존 이용자 통행 불편 초래... "배려 문화 확산 시급"

직장인 정모씨(36)는 최근 공용주차장 50% 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이점에 경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요즘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임산부 김모씨(33)는 최근 장을 보기 위해 차량을 몰고 한 대형마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임산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변을 배회하다 결국 일반 주차면을 이용했다.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에 마련된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2004년 경차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적으로 시범 도입한 제도다. 이후 2009년부터 공공기관 주차장의 약 10%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2010

년에는 해당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5~10%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교통편의,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주차구역을 무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날 광주 남구청사 지하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이용과 준수는 배려입니다'란 현수막까지 있었지만 SUV·중형 차량 3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일반 구역보다 폭이 좁은 공간에 차체가 큰 차량이 들어서면서 주차선을 넘은 모습도 확인됐다. 심지어 한 승용차는 경차 구역 앞을 가로막듯 세워져 통행에 지장을



남광주시청 공용주차장 경차구역



남광주시청 지하주차장 임산부구역

주고 있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도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는 일반차량이 버젓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남광주시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차 전용 칸에 중·대형 차량이

주차하면서 통로 폭이 좁아졌고, 차량이 교차할 때마다 속도를 줄여야 했다. 이러한 모습에 상인들은 "주말에는 차량이 더 몰려 접촉사고 위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시 과태

료가 부과되지만,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남구 관계자는 "경차나 임산부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 수시 순찰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과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장병국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제도 취지를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 배려 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5·18 46주년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1980년 5월 영령 희생 기리고 오늘의 민주주의 계승 내달 4일 공식 출범식... 시민·청년 참여 행사 본격화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최근 전일빌딩 245 4층 중회의실에서 96개 참가 단체와 함께 전반기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슬로건을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꽃처럼 쓰러져간 영령을 기리고,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날의 용기를 지난해 12·3 내란 과정에서 확인된 광장의 기억으로 소환, 오늘의 민주주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 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등 주요 주관 행사와 특별기획사업, 연대협력사업, 시민참여사업, 청년사업, 5·18 청소년문화제 등의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행사위원회는 25일부터 시민참여사업과 청년PM(Project Manager)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5·18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의 다양

한 사회적 의제를 '오월 정신'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전국 단체·모임이 대상이다.

시민 참여사업은 오는 3월12일까지 전국 단체·모임(5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사업은 '일상의 민주주의 확장', '연대·돌봄·평등·참여·다양성', '미래세대 참여', '국내외 민주주의 연대' 등을 주제로 체험·기행·공연·전시·학술 등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3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PM 공모 역시 같은 기간 진행된다. 해당 공모사업은 12·3 내란을 통해 발화된 청년의 목소리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1980년 이후 출생한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청년PM은 총 3000만원 규모의 청년기획사업을 직접 구성·운영한다. 이중 500만원 내외의 보수를 책정해 기획 프로그램 운

영 등의 업무 총괄을 맡길 예정이다.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3월18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모 참여 방법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www.518people.org)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공식 출범식은 3월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주의관에서 열린다.

이날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5·18 관련 3개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 등이 참석해 46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을 함께한다.

위원장 상임행사위원장은 "어느새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5·18 기념행사는 미래 세대로 이관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올해도 오월정신 계승을 이어가는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추제'를 열고 전국과 세계 시민을 오월 광주에서 환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연구사업, 타 지역·해외지원 및 연대사업, 그 외 행사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병오년(丙午年) 새해 맞이 합동세배 25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6 새해맞이 합동세배에 참석한 김병내 남구청장과 시·구의원 및 주민들이 어르신들에게 합동세배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허위 발주 43차례... 가족회사로 25억 우회 지급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수십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까지 광주지역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

주 업무를 담당하며 4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자재를 발주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협력업체에 자재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 가운데 세금 명목 약 2억1000만원을 제외한 24억9000여 만원을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가족 소

유 제조업체로 다시 입금받은 이른바 '우회 지급'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소비돼 남아 있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허위 발주와 내부 시스템 조작 등 병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사건은 항후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